

문 대통령 '지구 한바퀴' 여정 시작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마련된 아르헨 등 3개국 순방 먼저 체코부터 방문... 28일 바비쉬 총리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마련된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등 3개국 순방을 위해 체코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

기편으로 첫번째 순방지인 체코 프라하를 향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5박 8일 동안 이동 거리만 총 4만6000여km에 이르는 대장정에 나선다. 체코 프라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거쳐 귀국하는 일정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28일부터 체코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15년 체결된 한·체코 전략적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상호 교

역 및 투자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한다. 오후에는 체코 내 형성된 재외동포 그룹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체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두 나라의 국익증진을 위해 가고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 및 기업인을 격려한다. 이어서 다음 순방지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발할 예정이다. /뉴시스

“이재명, 불리한 증거 인멸... 즉각 체포해야”

하태경 의원, “본인이 거짓말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삭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해경궁 김씨 (@08_hkkim)'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과 관련, “이재명 지

사를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중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가 모두 삭제됐다”며 “이 중에서 4월5일 백업 내용이 우리 당의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공포로 선거법 위반 고발건의 증거자료다. 이 증거자료까지 삭제됐다”고 전했다.

이어 “4월5일 페이스북 내용은 제 아내는 트위터 계정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언급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 당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며 “이 지사가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페이스북을 삭제한 이유는 검찰조사 후에 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또 “이 지사의 증거 인멸 시도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아내 김혜경씨 이메일 계정을 폭파했고, 또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며 “그 뿐만 아니라 문자 폭탄이 온다고, 문자폭탄이 오면 핸드폰 번호만 바꾸면 되는데 핸드폰 기계를 통째로 바꿨다. 트위터 접속 흔적이 나 다른 증거들이 핸드폰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2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불교 중앙총부 찾아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전산 종법사와 이해찬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해찬 “남북 평화시대 여는 일에 많은 도움 필요”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 방문 김주원 종법사 예방 김 종법사 “우리가 바라는 것... 지금 진행 남북관계 지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평화시대 개척에서 원불교의 도움을 요청했다.

27일 이해찬 대표는 익산시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를 찾아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정권에선 임기 초에 정상회담이 이뤄져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평도에는 남과 북의 포문이 모두 닫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UN 등을 설득해 제재대상에 제외됐다”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철도 조사

가 이뤄지게 된다. 이런 큰 변화에 원불교가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만드는 일은 매달 단계로 가고 있다”면서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주원 종법사는 “남북화해와 평화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는 남북관계를 적극 지지한다”며 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취임 후 지난 6일 영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만난 후 13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의 취임 법회에 참석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

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4대 종단 지도자를 차례로 예방했다. /김진성 기자

보수 야당 예산심사 거부예 민주 “더이상 양보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수 야당의 예산 심사 거부예에 대해 “예산을 볼모로 정정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이런 식으로 파행을 초래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은 그간 예산심사 법안심사를 정국회의 내에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했다. 더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뉴시스

“한국당 지지자도 ‘유치원 3법’ 지지”

박용진 의원, “더 이상의 시간끌기 없어야 조속 통과 요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법(유치원 3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치원 3법)의 처리와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사립유치원 회계와 공공성의 강화라는 문제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진행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9%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9%밖에 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한국당 지지자들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77.9%가 법안 통과에 적극 찬성했다. 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26.3%가 한국당의 책임, 21.3%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28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꼭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과 관련해 “이 경우에는 강제성을 띠지 않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법체계상 안 맞고 도덕적으로도 안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도 이 사실을 잘 알 텐데 한유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법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적 사용료 지급에 대한 법안과 ‘유치원 3법’이 담은 회계 투명성은 엇바뀌먹을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실시한 여론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5%다. /뉴시스

음주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처리를 앞둔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법안소위는 이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앞서 제출된 6개의 법안이 아닌 소위에서 합의된 통해 도출한 수정안으로 가결시켰다.

수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역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최고형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현행 1~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높은 수위를 적용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